

문 대통령 “과분한 사랑·지지, 무한 감사”

靑 본관서 퇴임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퇴임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누구도 부정 못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이라며 차기 정부에 이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 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조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어주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진국가가 됐다”며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 저의 퇴임시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당시를 떠올린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 들어”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韓 역사 계속 이어나가길”

에 찬탄을 보냈고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루지 못했다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열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를 향해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임기 내 공을 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과제를 물려준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아쉬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다”며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5년을 돌아봤다.

이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며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애가 있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었다고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해 낸 것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

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

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이된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의 성공 방식을 알게 된 것”이라며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 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와 규제를 허문 진폭적인 지원, 무엇보다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방역 등 코로나19 대응도 임기 중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이 됐다”며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웠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 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 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도의원에 금품제공? 명백한 허위사실”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단호히 맞서 민주주의 지킬 것”



강임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김종식 전북도의원이 주장한 금품 제공설을 강력 부인했다.

강 예비후보는 9일 자신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김종식 전북도의원 군산 제2선거구 예비후보를 상대로 “정 치인생을 걸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군산시 2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 군산시장 경선 직전인 3월 강임준 예비후보에게 현금 200만원씩 두 차례 총 400만원을 받았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식 도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경선 불복세력들의 치밀한 정치 공작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단 한 푼의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식 도의원이 의례적으로 선거사무실을 오갔으며, 단 둘이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며 “경선 전 2번의 방상사 합동어문조사에서 39%라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기록했고, 정책선거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깨끗한 선거로 군산시장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5~26일 실시된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경선에서 문태규, 서동석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강 예비후보는 “군산시장 경선 불복세력들이 지난 1일부터 시·도의원 경선 결과가 나오자 김종식 도의원을 접촉했고, 다른 낙선 후보자들보다도 접촉한 것이 확인됐으며, 낙선후보에게 돈을 받았다고 확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 불복세력들은 군산을 재경선 지역으로 만들려고 음모와 정치공작 일환으로 이번 김종식 도의원 예비후보의 금품 수수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SNS 가짜계정을 통한 흑색선

전, 가짜계정을 통한 불법적인 정치 유료광고, 경선 이틀 전에 불법적인 대량 문자의 무차별 살포 등 이번 군산시장 경선이 어느 때보다 혼탁스러웠다며 김종식 도의원 예비후보도 그 연상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김종식 도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회견이후 전 북경철정에 공식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김종식 도의원이 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니 무고죄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 다. 민주당 전북도당에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징계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김종식 예비후보들 중의 하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예비후보는 “경선 불복은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명백한 범죄라며 제 정치 인생을 걸고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후에도 가능한 모든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전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경선 불복세력파 단호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싱크홀 안전점검 시행 재발 방지

민중 양경숙 의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검토해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관리대상(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돼 있다.

양 의원은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부산 1건, 포항 2건, 당진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시설 또는 지역은 전무한 실정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에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

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양경숙 의원은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도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라며 “특별안전점검에 대한 규정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전주(을) 지역(서신동, 삼전동, 효자동) 총 3개 사업으로 ▲성지산근린공원 연결도로 조성(2억원), ▲가마, 그린공원 내 친수시설 조성(3억원), ▲스마트지능형(AD) 방범용 CCTV 시스템 도입(3억원) 등 총 7억원 규모이다.

양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호남제일고 3억 1,100만원, 동양자동차고 3억 5,500만원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중앙선관위, 지선 참여 정당 10대 정책·공약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포털(policy.nec.go.kr) 사이트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공약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2개 정당의 중앙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5월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민중 최후석 예비후보 장수군수 재경선서 승리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최후석 예비후보가 지난 5월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 한 장수군수 재경선에서 또다시 양성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최 후보는 “이번 재경선에서도 또다시 지지해주신 군민과 당원동지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군민에게 다가와 반드시 본선을 승리로 이끌고 행복과 미래가 있는 장수를 만들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도 군의 민심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치를 바꾸고 군수를 바꿔야 장수에 미래가 있다고 믿는 군민의 준엄한 결단이 자신을 지켜준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경선까지 경쟁했던 양성민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며 “이제는 함께 하나의 장수, 통합의 장수를 만들어 함께 장수발전의 동력을 찾아내시길”은 간곡한 소망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선관위 “거소투표시 14일까지 신고해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청을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임영대 상사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규칙이 정하는 외관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청을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등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일에도 불구하고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민중 김수홍 의원, 특교세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에 대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등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일에도 불구하고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김 의원은 “동호인들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비동태 니스공원이 준공되고 파크골프장 조성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 생활스포츠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를 충족하지 못해 추가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비를 확보해 민경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증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익산시의 파크골프장은 민경강변에 18홀 규모로 조성 완료돼 있으며, 북부권 동호인을 위해 어울림파크골프장이 용인면 칠막리에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파크골프장 동호인의 수요